

2.대담한 계획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파괴하다

파괴의 프레임

적폐청산의 프레임: 정권장악

근로자 보호 위장전술: 친노조 반노동

사학 비리 프레임: 교육장악

친환경 프레임: 산업기반 파괴 및 원자력기술파괴

재벌개혁 프레임: 기업 장악

장기집권 교두보: 재정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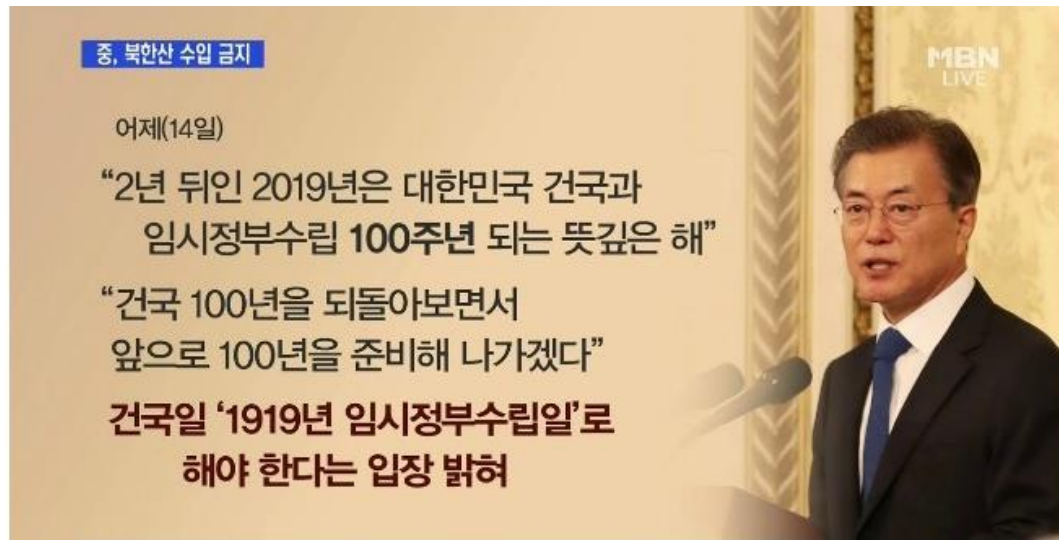
헌정 파괴: 체제 도전?

적폐청산의 프레임

종족주의 (tribal nationalism)와 전체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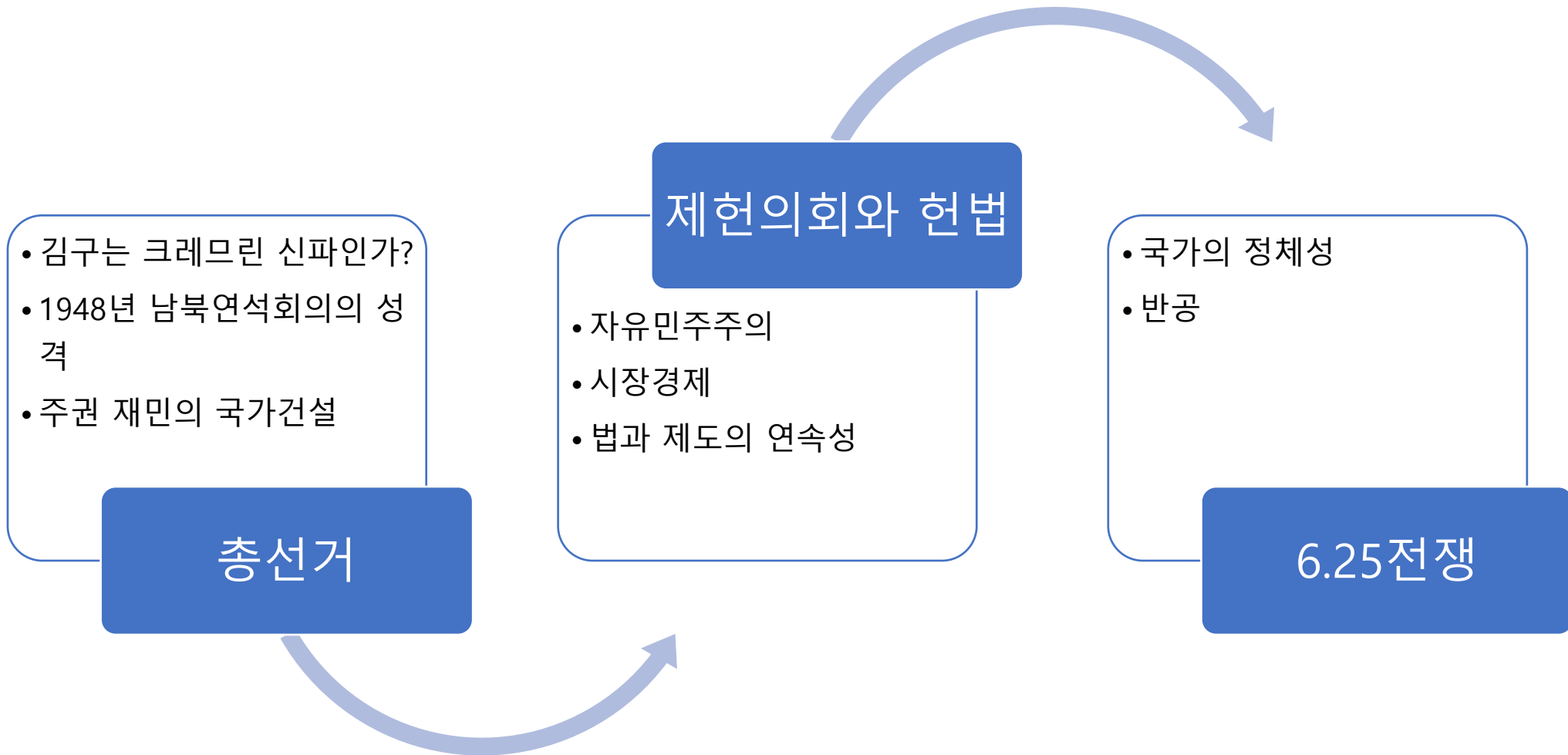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부정: 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서훈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됐고 오늘날 국군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원봉은 광복후 북한 정권에 참여했고 6·25전쟁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는 몰라도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포용국가 대한민국



폴 포트

- 폴 포트("썩은 사과는 상자 째로 버려야 한다!")
 -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 크메르 루주 전범재판소(ECCC)를 설립하여 사건 발생 이후 거의 30년만에 비로소 책임자에 대한 처단이 시작



영화 킬링필드의 한 장면.

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수상작 /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색상 후보작

독재의 선언: 무엇이 새로운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4.15 총선 정치

이해찬 "이번 총선, 촛불혁명 완수 분수령...새로운 100년 열겠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1.16 12:02 조회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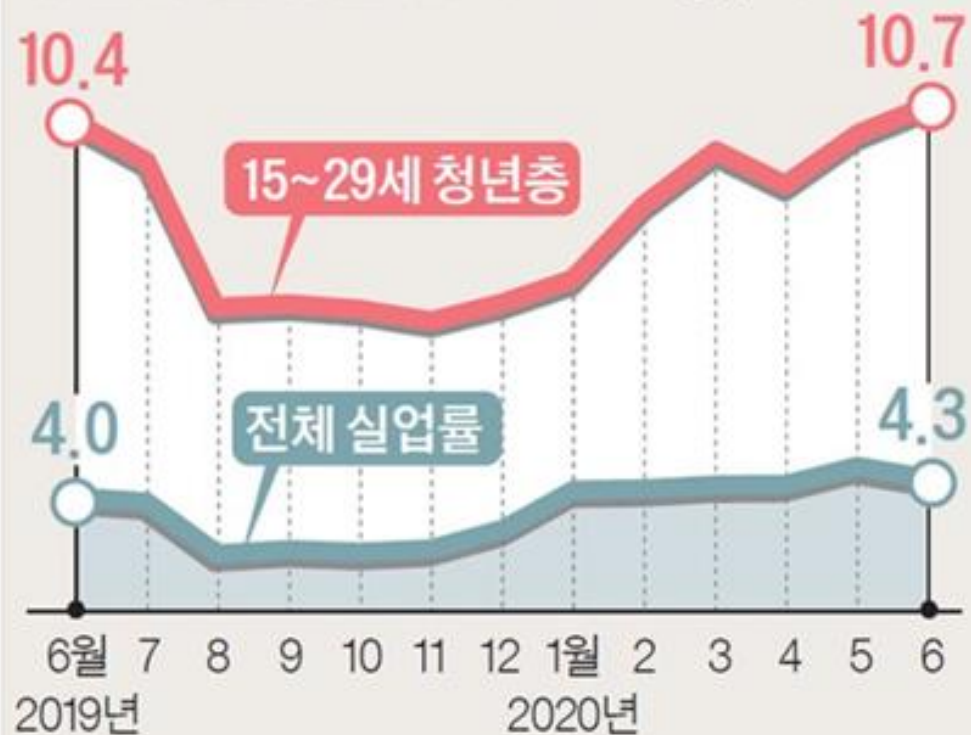
프린트 ㄹ 글자 크기 + -



근로자 보호 위장전술: 친노조
반노동

근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층 실업률 증가하고 단위: %



구직 활동 없이 '쉬었다' 단위: 명

2020년 6월 45만5000

2019년 6월 36만

인국공 사태

‘인국공 사태’에 분노한 청춘들...勞·勞 갈등까지 겹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일파만파’

취준생 중심으로 집단유직임
전환중단 폭청원 20만명 넘어
野 “아빠찬스 이어 문빠찬스”

4개 보안검색 노조끼리 갈등
정규직 노조는 1인시위 돌입
양대노종 세력다툼도 불거져

지훈구, 박재완 기자 | 입력 : 2020.06.24 17:26:56 | 수정 : 2020.06.24 22:56:42 | 0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장기로 노조위원장인 보안검색요원 직고를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노조를 누가 근로자 대표로 만들었는가?

-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제쳐놓고 별도의 대화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는 밀어붙였다. 일종의 편법을 정부가 주도한 셈이다.

- [출처: 중앙일보] 민노총, 노사정 대타협 최종 거부...김명환 위원장 등 총사퇴 수순

경제

경제정책 산업 금융증권 부동산 과학미래 글로벌경제 고용노동

민노총, 노사정 대타협 최종 거부...김명환 위원장 등 총사퇴 수순

[중앙일보] 입력 2020.07.24 00:03 | 경제 4면 지연보기

원본 크기 가

김기찬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무결한 23일 밤 서울 잠을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결국 민주노총에 의해 무산됐다. 23일 민주노총은 제1차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1479명의 대의원 중 1311명이 투표해 805명(61.73%)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투표를 앞두고 찬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서명은 보이지 않는 위력에 의해 할 수 있지만, 온라인 투표는 온전히 자기 생각을 담기 때문이다.

사학비리 프레임

사학비리가 공교육화의 전제조건인가?

유은혜 "사학비리 감사 확대, 감사결과 전문 공개" - the300 ✓

the300.mt.co.kr/newsView.html?no=... ▼

교육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종합감사를 확대한다. 감사 결과 전문도 공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근절

유은혜 "'비리 사립유치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 중앙일보 ✓

news.joins.com/article/23045432 ▼

유은혜 "'비리 사립유치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중앙일보] 입력 2018.10.15 11:51 인쇄 기사 보관함(스크랩)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유은혜 장관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843.html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불거진 비리 사립유치원의 행태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유치원 이어 사립대 겨냥... 2624억 회계부정 비리... ✓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4235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하반기에 사학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했다.

교육부, 사학 비리 규제·감독 강화한다 - 전자신문 ✓

www.etnews.com/20191218000197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

- 게, 가제, 봉장어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사학의 역할
- 공교육의 역설: 사교육의 증가?
- 교육계의 좌경화
- 교유계의 무책임: 국민에 대한 생체 실험?

- 조국사태
 - 조국 본인의 혐의
 - 딸 조민 관련 의혹
 - 아들 조원 관련 의혹
 - 아내 정경심 관련 의혹
 -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탈세
 - 사문서 위조 혐의
 - 공무집행방해 혐의
 - 증거인멸과 절도
 - 수사 및 재판 과정
 - 동생 조권 관련 논란
 -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
 - 종조부 조맹규 관련 논란
 -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 인사청문회 과정

친환경 프레임: 숨겨진 목적은
무엇인가?

25.4°C
실내
미세먼지 13



세상을 바꾸는 금융

데일리안

전체기사 포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IT/과학 연예 스포츠 생활문화 세계 D-TV 카드뉴스 착한선진화 PR

원자력학회 "탈원전 이후 원자력 환경 악화...특단 조치 필요"

[데일리안] 입력 2019.06.24 00:21 | 수정 2019.06.24 05:57 | 조인영 기자



우수인재 취업지원 확대, 원자력진흥법 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제안

우수인재 취업지원 확대, 원자력진흥법 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제안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모금의 일환으로...

탈원전의
숨겨진
목표가
무엇인가?

태양광의 문제

정치 일반

중국은 신났다, 탈원전에 태양광 모듈 수입 1년새 43% 폭증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입력 2020.06.23 03:00 | 수정 2020.06.23 07:37

탈원전 수혜, 1~4월 1400억원... 국산 점유율은 가파르게 하락

정부의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의 기반을 허물며,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는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총 1억1758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모듈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는 대형 패널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의 최상위를 차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로 중국산이 국내 태양광 시장을 잠식한다'는 비판에 대해 "2019년 태양광 모듈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이 78.7%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반박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국산 태양광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더 하락하고 있다.

재벌개혁 프레임

소유구조가 문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 헌법
-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한국경제

프린트

닫기

대한항공 대표 갈아치운 국민연금...조양호 회장, 20년 만에 '강제퇴진'

입력 2019-03-27 17:45 수정 2019-03-28 00:3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사진)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의 반대로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1999년 4월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표이사를 맡은 지 약 20년 만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재계 14위(자산 기준)인 한진그룹 총수를 핵심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임기 3년) 재선임 안건을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시켰다. 이 회사 정관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66.66%)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지분율 11.56%)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게 결정적이었다.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 등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도 대부분 국민연금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대한항공 회장직(미등기 임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최대주주(29.96%)이자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펀드의 세계

- 소액주주의 운동이
냐 펀드주의 운동이냐?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초과자본금의 주주환원과 비핵심 자산 처분 등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이 논의 중인 지배구조 변경안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인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엘리엇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취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이른바 '벌처 논리'가 강하다고 보고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엘리엇 계열 펀드의 투자 자문사인 '엘리엇 어드바이저 홍콩'은 지난 13일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이사진에 보낸 서신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컨설팅사 콘웨이 맥켄지의 '독립 분석보고서'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엘리엇은 이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심각한 초과자본 상태로 현대차는 8조~10조원, 현대모비스는 4조~6조원에 달하는 초과자본을 보

엘리엇, 현대차그룹 또 압박...“초과자본금 주주환원해야”

등록 :2018-11-14 15:57 수정 :2018-11-14 19:52

현대·기아차 등 계열 3사 이사진에 서한
이사 추가 선임·비핵심자산 처분 등 요구
증권가 “주총서 유리한 위치 선점 노란듯”
현대차그룹은 불필요한 공식 대응 자제
“‘벌처’ 논리에 일일이 반응할 이유 없어”

장기집권의 교두보: 포퓰리즘
과 재정파괴



비경제적 교두보

공수처

검찰개혁

헌법개정

경제적 교두보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어디에 썼나 살펴보니

[중앙일보] 입력 2018.08.20 18:28 수정 2018.08.20 21:25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거냐"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인터넷에선 이런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에 투입한 예산을 54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2017·2018년 본 예산 36조 원에 2차례 추가경정예산 14조8000억 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을 합친 액수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22조원, 공공일자리 확충 3조원 등 양적 지표에만 초점을했다는 지적. "재정투입은 단기처방에 불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17·2018년 책정 예산 단위: 원

2017년

총 18조3861억3200만

2018년

총 24조1958억6300만

37억 7400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51억 6000만
10조4323억 5700만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적 인적지원 개발	12조4436억 3400만
1조4485억 2100만	공공일자리 확충	1조9068억 1100만
1조1799억 2500만	혁신형 창업 촉진	8781억 7800만
3조2970억 8000만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3조3994억 9400만
305억 1700만	사회적경제 활성화	474억 5000만
4827억 900만	지역일자리 창출	4455억 4000만
270억 3200만	비정규직·남북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279억 4700만
266억 4000만	근로여건 개선	2조9985억 8100만
1조4575억 7700만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2조430억 6800만

자료: 국회예산처,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분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MK뉴스

14조 재난지원금 풀리니...편의점株 웃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주 눈독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제한
언택트 온라인몰서도 못써
생필품 수요 편의점 몰릴듯

GS·BGF 올 실적 전망 '맑음'
편의점 진출 서희건설도 화색

김규식 기자 입력 : 2020.05.11 17:36:06 수정 : 2020.05.11 19:50:59



헌정파괴?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경제 살리기

운명적 대결

대한민국의
역사의식과 미래
지향적 국제관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관

파탄난 재정의
회복 과정

구체적 법개정